

김대기, 각종 현안 팔 걸어... 김성한, 외교 공약 총괄

김대기, 정책·예산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 정무감각 겸비 평가
尹과 동감·동창 관계 김성한... 이론·정책 겸비 국제정치 전문가

〈1면에서 계속〉 윤 당선인은 김 내정자 인 선을 두고 “정통 경제관료”라며 “대통령 실 행정관에서 시작해 선임행정관-경제정책비서관을 거쳐 경제수석-정책실장 자리에 오른 보기 드문 이력의 소유자”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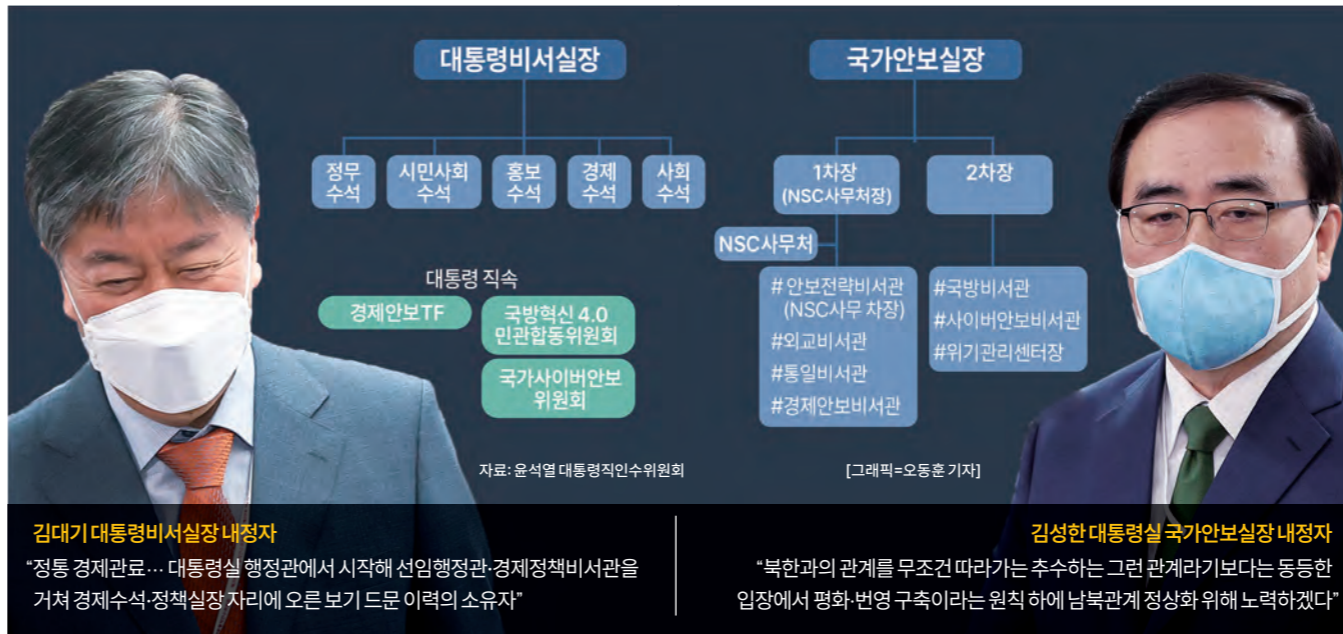
김 내정자는 지난달 새 정부 초대 대통령령비서관에 지명되자마자 윤 당선인의 ‘오른팔’로서 각종 현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일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된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은 그가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윤 당선인을 대신해 김 내정자가 최 부사장을 면담했다”며 “(최 부사장은) 윤 당선인이 정한 인선 기준에 적합한 인물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1일 대통령실 인선안을 낭독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관은 “김 내정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인선했다”고 밝혔다.

능력 분위로 김 내정자를 발탁했다는 것이 윤 당선인 측 입장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출신성분’도 일정 부분 영

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김 내정자는 참여정부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이례적으로 이명박정부에서 중용돼 그를 친이계(친 이명박계)로 분류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윤 당선인 측이 발표한 국무위원 17명 중 7명이 ‘MB맨’ 출신일 정도로 친이계가 윤석열정부에서 중용되고 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특정 계파 출신 기용 차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김 내정자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령비서관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깜짝발탁’을 이유로 그가 당정정을 서로 잇는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명박정부 시절 김 내정자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김 내정자 인선에 대해 “신의 한수”라면서 “다만 선거 때 역할을 안 하신 분이... 난데없이 이렇게 임명돼서 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주장해 여론을 낚았다.



尹과 동감·동창...尹 대선 출마 후 외교공약 총괄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1960년생(62세)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윤 당선인과 동감인 그는 윤 당선인의 서울 대광초교 동기동창이기도 하다. 김 내정자는 윤 당선인이 작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로는 줄곧 외교안보 자문으로 활동했으며 대선 기간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아 윤 당선인의 외교 공약을 다듬는 등 외교정책

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김 내정자는 고려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 조교수·부교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미주연구부장으로 근무했다. 2007년부터는 모교인 고려대로 자리를 옮겨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임했다. 김 내정자도 이명박정부 출신이다. 2010년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국방안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그

는 정권 말인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냈다.

정치권에 의하면 김성한 내정자의 외교 기조는 굳건한 한미동맹,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전향적 한일관계 등으로 압축된다. 김 내정자는 1일 대통령실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을 묻는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무조건 따라가는 관계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평화·번영 구축이라는 원칙 하에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누차 강조하는 한미의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도 그의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2011년 12월 작성한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공조의 방향’ 논문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급변사태 시 중요한 전략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면 한반도 통일 달성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북한 급변사태를 한미일 3국이 공동대응하는 게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의 영향을 받은 때문인 듯 윤 당선인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해왔다. 3월 말에는 아이보 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양국 관계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굴종적 평화 구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정부 대북정책과 차별화되는 김 내정자의 기조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자칫 한일 관계에 대한 그의 급진적 태도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측은 “(김 내정자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상설”이라며 강력 부인하는 상황이다. 오주환 기자 jhoh@skyedaily.com

항공·여행업계 “입국시 PCR 확인서 폐지를...”

대한상의, 관광산업위원회 개최 입국·여행경보 완화 등 건의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점차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체제로 전환되면서 관광, 항공 등 관련 업계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폐지, 비자 발급 정상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제24차 관광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관광시장 선점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기홍 대한상의 관광산업위원장(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해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장, 이훈 한국관광학회

장,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등 업계, 학계 전문가 20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엔데믹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회복기에 접어든 글로벌 관광시장을 선진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에 나선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수요가 위축되면서 관광기업과 일자리 등 공급 측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0년 관광업체 수는 2019년 대비 1310개가 줄어들었고, 종사자 수 또한 30.7% 감소했다. 총 매출액은 69.4% 감소했고, 관광산업 생산지수 역시 2019년 12월 111p에서

2020년 2월 87.7p로 급락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 실장은 “다행스럽게도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올해 국제관광 시장은 2019년 대비 40~50% 수준까지는 회복될 전망”이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2024년 이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방역위기 대응에서 엔데믹화 이후 새롭게 도래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광산업의 성장 방향성을 모색하고 정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디지털 관광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지원, 관광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 등의 과제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회복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은 “변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방향의 국인에 비자 발급을 2019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를 완화해 업계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업계에서는 국제 항공노선 및 출입국 절차 등의 정상화를 건의했다. 김광욱 한국항공협회 본부장은 “PCR음성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백신 미접종 소아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며 “심야도착시간 제한 등 방역정책으로 축소됐던 국제 항공 노선과 슬롯도 확대해 여행수요 증



특별여행주의보를 2년 만에 해제한 지난달 14일 이후 해외 여행객들이 다시 붐비기 시작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호텔업계는 인력 채용 지원과 세제 합리화를 건의했다. 정오섭 호텔협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호텔업계 종사자는 20~30% 감소한데 청년들의 관광산업 일자리 기피까지 겹쳐 인력수급

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자리 지원금 등 고용 지원과 인재 이탈방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산업에도 부가세 영세율, 호텔 사용토지 분리과세 적용 등 세제의 합리화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기찬 기자 gskim@skyedaily.com

Sustainable Action

현대백화점 집하장에서 발생한

폐지를 재사용하여

100% 재생지를 만들고

패키지로 제작합니다.

현대백화점은 자원순환을 통해 책임감있는 친환경을 실천합니다.

현대백화점 독립 자원순환 시스템은 연간 목재 약 2,000 ton, 탄소 약 3,298 ton CO2eq, 폐기물 약 202 ton, 에너지 약 1,617,895,452 kcal, 물 약 19,987,000 L 를 감소시킵니다.



독립 자원순환 시스템 영상 확인하기